

## 머리를 맞대고 고용정책의 길을 찾다

- 2025년 첫 고용정책심의회 개최, 노사·전문가·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
- 고용 취약부문의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25년 일자리 상황 및 대응방향』, 『제5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등 주요 고용정책 논의·의결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2월 27일(목) 14:30, 로얄호텔서울 3층(그랜드볼룸)에서 2025년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심의회에는 위원장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로 노사 대표와 전문가, 관계부처 정부위원이 참여하여 『'25년 일자리 상황 및 대응방향』, 『제5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등 4개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심의·의결했다.

- \* ▲'25년 일자리 상황 및 대응방향(제목만 공개) ▲제5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공개)
- ▲'25년 고용영향평가 과제 선정(안)(공개) ▲일학습병행 직종 및 직종별 교육훈련기준 개정(안)(공개)

우선 2025년 일자리 상황과 정책적 대응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고용 취약부문의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정부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정부는 1분기까지 120만개 이상 직접일 자리를 신속 채용하고, 3월 19~20일에는 대규모 채용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형 청년 취업지원 보장제”를 통해 5만 명의 청년에게 졸업 후 4개월 내에 조기 개입하여 1:1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시·경력직 채용 경향에 대응하여 5.8만 명의 청년에게 일경험 기회를 제공한다. 그 외에도 중장년에게는 연령대별로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육아지원 3법이 안착되어 양질의 일자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적극적인 취업지원 정책도 강화한다. 구직자에게는 고용24를 통해 인공지능(AI)·빅데이터 기반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고용센터의 상담 기능을 강화하여 취업의욕을 고취시킬 예정이다. 또한, 지역 내 고용서비스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고용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수요자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연계·제공한다. 특히 청년 중심 고용네트워크 구현을 위해 서울고용복지+ 센터를 통합네트워크로 구축할 예정이다. 기업에는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기업지원서비스 창구를 단일화하여 기업진단, 종합 컨설팅, 채용지원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지역 우수기업 1천개사를 대상으로 전담 관리하여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구인수요를 발굴할 예정이다.

또한 제5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이번 기본계획은 그간 고령화된 일자리 위주의 건설업 분야에 청년·여성 등 신규 인력이 진입하여 근속하면서 숙련기능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건설경기 악화에 따른 고용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실직 건설근로자에 대한 재취업 및 생계지원을 강화하는 부분에 중점을 두고 수립되었다.

한편, 이날 『2025년 고용영향평가 과제 선정(안)』, 『일학습병행 직종 및 직종별 교육훈련기준 개정(안)』 등 심의안건 2건도 의결되었다.

김문수 장관은 “일자리 여건과 고용 취약부문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위원들이 풍부한 현장경험과 전문가의 식견을 제시해주시길 기대한다”라면서, “청년·건설업 등 취약부문에 대한 모두의 관심과 협력을 통해 지혜를 모을 때”라고 강조했고, “오늘의 논의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고용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① 고용노동부장관 모두발언 ② 『2025년 고용영향평가 과제 선정(안)』 ③ 『일학습병행 직종 및 직종별 교육훈련기준 개정(안)』

<별첨> 『제5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전문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www.moel.go.kr) > 정책소개 > 정책자료실에서 찾을 수 있음)

담당부서	노동시장정책관 고용정책총괄과	책임자	과 장	이상임 (044-202-7210)
		담당자	사무관	이치훈 (044-202-7397)
담당부서	노동시장정책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책임자	과 장	지영철 (044-202-7404)
		담당자	서기관	이민진 (044-202-7214)
담당부서	직업능력정책국 기업훈련지원과	책임자	과 장	이우영 (044-202-7264)
		담당자	사무관	양선재 (044-202-7309)



반갑습니다.

우선 일자리 여건과 고용 취약부문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바쁘신 중에도 어려운 과제를 함께 고민하고자 자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올해 일자리 상황은 상당히 어려울 전망입니다.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경제심리 위축 영향과 함께, 청년·고령자, 건설업과 같은 고용취약 부문의 어려움이 우려됩니다.

특히, 청년은 수시·경력직 선호와 같은 채용시장의 트렌드 변화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쉬었음 청년”도 40만 명대를 꾸준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 악화와 건설투자 부진이 계속되면서 일자리가 많이 나오는 건설업에서 고용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이런 고용 취약부문을 위한 정부의 선제적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첫째, 정부는 “한국판 청년 취업지원 보장제”를 통해 청년이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학을 졸업하는 청년들이 졸업 후 4개월 내 정부의 1:1 맞춤형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쉬었음 청년”을 발굴하기 위해 정부와 자치단체, 대학 등 민간과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청년들이 취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일정험 기회를 늘리고 첨단분야 혁신훈련도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중장년 여러분이 원활하게 전직하고 재취업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경력경로 선택 및 준비가 필요한 40대는 개인 맞춤형 상담을 통해 생애전환기 경력설계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조기퇴직 시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50대를 위해서는 재취업을 유형화하여 체계적으로 훈련을 지원하겠습니다. 정년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일하기를 희망하는 60대 이상 고령층에게는 계속고용장려금을 통해 계속고용 확산을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일하는 부모는 일과 육아를 양립할 수 있도록 2월 23일 시행된 육아지원 3법의 안착을 추진하겠습니다. 다행히도 작년 육아휴직 사용자는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올해 초도 육아휴직 사용자가 42.6% 증가하여 일·가정 양립 확산 추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중소기업의 대체인력 지원과 체감할 수 있는 현장형 홍보를 통해 일하는 부모의 육아 지원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넷째, 건설업의 경우 「제5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을 통해 청년과 여성 등 신규인력이 유입하여 근속하면서 숙련기능인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건설업 분야의 임금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여 기본적인 근로여건을 보장하고, 소규모 현장의 재해예방 활동을 지원하여 안전한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그럼 안전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를 듣고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전문가적 식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분야	과제명	소관부처·자치단체
인 구	<b>1. 취업지원 전달체계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b> - 청년·중장년층을 중심으로 •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효과적 작동을 위해 취업지원 전달체계 효율화 도모	<b>고용부</b> 청년고용기획과 고용인력정책과
	<b>2. 늘봄학교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b> • 저출산 문제 해소 및별이저소득층 등 초등 교육돌봄 수요에 대한 국가적 책임 강화	<b>교육부</b> 늘봄학교정책과
	<b>3.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의 고용영향</b> • 농업인력 고령화에 따른 인력구조 불균형 해소를 위한 청년농 지원정책 발굴	<b>농식품부</b> 청년농육성장책팀
산 업	<b>4. AI 바우처 지원사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b> • 데이터 활용 및 AI 생태계 강화를 위한 바우처 지원사업 추진	<b>과기정통부</b> 인터넷진흥과
	<b>5.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b> • 첨단의료복합단지가 국내 의료산업의 일자리, 인력수급, 근로여건에 미친 영향 등 분석	<b>복지부</b> 보건산업정책과
	<b>6. 창업기업의 성장단계별 지원 정책의 고용영향</b> • 창업기업 생존율 제고 및 고용증가를 위한 맞춤형 정책 발굴	<b>중기부</b> 신산업기술창업과
지 역	<b>7.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의 고용영향</b> - 지역체감형 일자리프로젝트(경북)를 중심으로 • 사업 참여 지역의 노동시장 활성화 달성도를 평가하여 지역일자리사업 개선	<b>고용부</b> 지역산업정책과 <b>경상북도</b> 경제정책노동과
	<b>8. 지역 주도 지방소멸 대응 정책에 대한 지원(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역고용에 미치는 영향</b> • 지방소멸 문제 대응, 지방소멸 지원정책의 지역고용효과 제고방안 모색	<b>행안부</b> 균형발전제도과
	<b>9. 영종도 복합리조트 도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지자체 신청)</b> • 관광산업 활성화 핵심 트렌드인 복합리조트가 인천 지역경제,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 분석	<b>인천시</b> 경제자유구역청 서비스산업유치과
	<b>10. 제주용암해수산업단지 조성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지자체 신청)</b> • 용암해수자원 개발을 통해 취약한 산업구조 개선 및 지역 자립경제 기반 구축	<b>제주도</b> 미래성장과

□ **추진배경**

-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학습병행 직종별 교육훈련기준을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고시하여야 하여야 함

(일학습병행법 제7조, 제11조)

\* 일학습병행: 청년이 먼저 취업하고 기업과 학교를 오가며 학업과 직업훈련을 같이 하는 제도

\*\* '20년 「일학습병행 직종 및 직종별 교육훈련기준」 최초 고시 후 3차례 개정

□ **일학습병행 교육훈련기준 주요 개정 내용**

① **신규 종목 개발**

- 산업계 기술 변화, 미래 훈련 수요 등 반영하여 4개 종목 (말馬이용, 선박도장, 소방시설관리점검 등) 신규 고시\*

\* 연구용역 통해 관련 협단체·전문가 등 의견수렴 완료('23.8월~'24.10월)

② **기존 종목 개선**

- 산업 변화 등 반영하여 훈련 내용 조정 필요한 기존 종목 105개 (호텔관리, 반도체설계, SW개발 등) 개선

③ **종목 폐지**

- 훈련 저조하며 산업 변화 등 고려할 때 향후 훈련 필요성 낮은 20개 종목(섬유공예, 광물·석유자원개발 등) 폐지\*

\* 3년간 연평균 훈련인원 10명 이내이며, 폐지 후 2년의 경과규정 둘 예정

④ **교육훈련기준 이수시간 규제 완화**

- 과목별로 최소훈련시간 이상만 이수하면 최대 훈련시간은 제한하지 않도록 규제 완화

\* (現) 과목별 기준 시간의 ±50% → (改) 과목별 기준 시간의 -50%~제한 없음

□ **향후 추진 일정**

- 「일학습병행 직종 및 직종별 교육훈련기준」 고시 개정 및 발령